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한국인의 대외 정체성: 세계화와 주요국 및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

이숙중
EAI 시니어펠로우·이사(성균관대 교수)

김세영
EAI 연구원

본 연구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대외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5년간(2005-2020) 조사결과를 통해 세계화, 국익에 대한 위협 요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은 개방 무역과 국제기구의 결정은 지지하는 반면 외국인 국적 취득이나 원조에 대해서는 방어적이며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혼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해 질병의 확산 등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증대한 것을 확인했다. 주요국에 대한 인식에서는 2015년 이후 북한을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점수가 감소하였고, 특히 지난 5년 사이 대중인식이 비호감 구간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인들은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더욱 지지하며,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미동맹의 균형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국우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협력과 거버넌스를 위해 취해야 할 중견국으로서의 태도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I. 들어가며

단일민족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대사는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 및 분단이라는 폭력적이고 아픈 상처를 유산으로 남겼다. 그러나 광복 이후 40여 년 내에 빠른 산업화와 점진적 민주화를 모두 달성하면서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이중의 국가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많은 개도국들에 모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 규모,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외교력 등 국력 측면에서 한국은 주요 중견 선진국으로 부상하였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여 명실공히 G20 일원으로 아시아를 대표하고 있다. 국제사회 못지않게 중요한 대외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주요국들과의 관계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오면서 중국과도 긴

밀한 경제관계와 정치적 협력을 심화해 왔다. 그러나 미중 간 전략적 경쟁관계가 치열해지면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하라는 압력과 딜레마(dilemma)를 맞고 있다. 한편, 근린국가 일본과는 수년간 관계가 지속해서 악화하면서 우호협력의 정신이 쇠퇴하게 되었다. 본고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지난 15년간의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상 한국이 보는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세계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 국익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주요 3개국에 대한 인식 등 세 파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세계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

1. 개방무역에 대한 지지는 공고하나 원조나 외국인 국적 취득에 대한 지지는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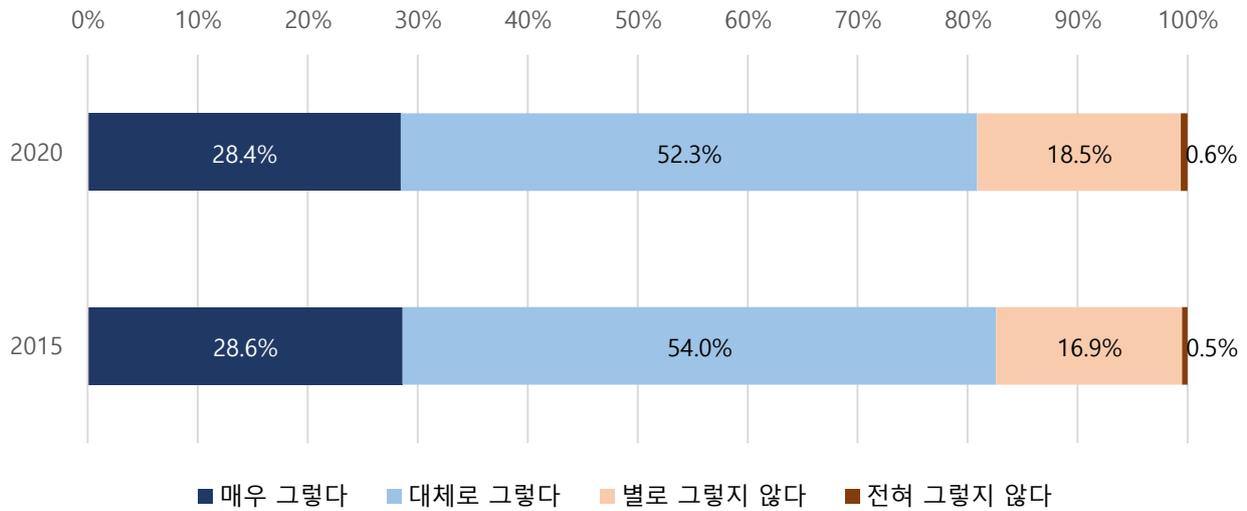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교역 국가이다. 2000년대부터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었던 무역의존도는 이후 조금 감소하였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내총생산의 6할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액 비중은 35.2%, 수입액 비중은 31.1%를 차지하면서 한국은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¹ 수출로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인 만큼 바깥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웃바운드(outbound) 세계화를 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²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듯 “세계화 시대에 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28.4%가 ‘매우 그렇다,’ 52.3%가 ‘대체로 그렇다,’ 18.5%만이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5년 전인 2015년도 조사에서도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는 답이 각각 28.6%와 54.0%로 2020년도 조사 수치와 비슷했다. 즉, 8할 이상의 한국인이 자유무역에 대해 긍정적인데 자유무역협정으로 농민이나 영세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일자리를 잃는다는 유럽이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에 국산품 애용이란 시대착오다”라는 주장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긍정적 비율이 2005년 39.4%, 2010년 49.4%, 2015년 53.1%, 2020년 74.6%로 지난 15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는 합이 2005년 40.7%, 2010년 49.4%, 2015년 50.9%로 늘어났다가 2020년 조사에서는 45.9%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은 2005년 30%에서 2010년 40.7%로 늘어났다가 2015년 34.2%와 2020년 33.6%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순혈주의가 강화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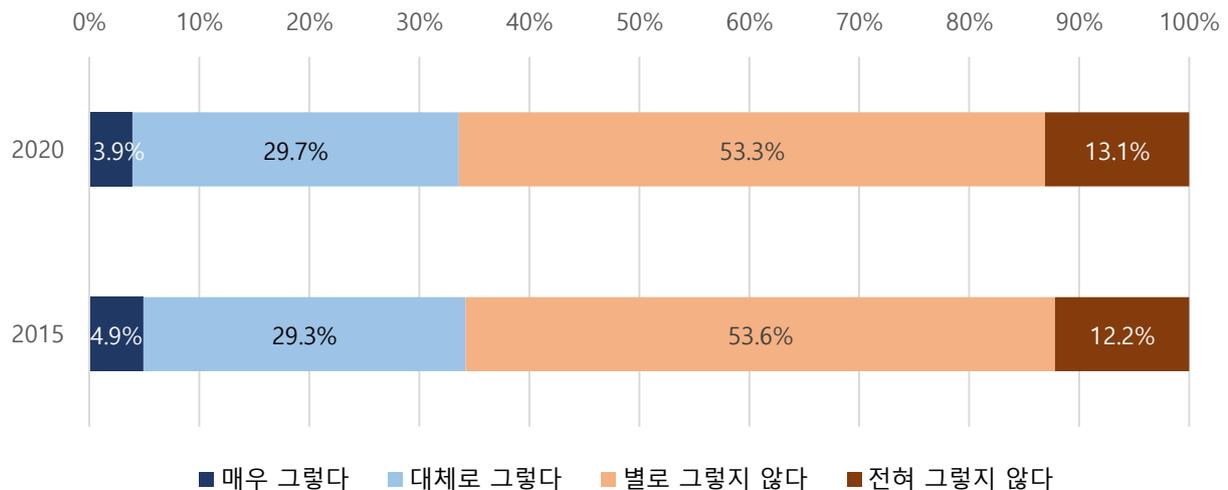
¹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 (2020년 8월 접속)

² 이숙중·장훈. 20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그림 1> 세계화 시대에 더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림 2>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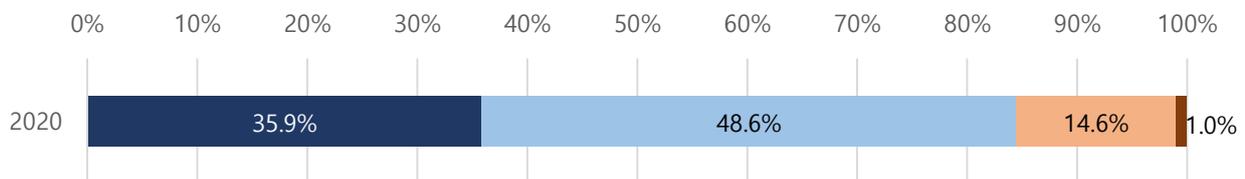
2.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 증대

반세계화 조류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2020년 조사에서는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문항들을 새로 넣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를 의식한 듯 세계화의 폐해 가운데 “세계화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압도적인 8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세계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74.5%가 동의했다.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한국의 경제에 점점 더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9.5%가 동의했는데, 이는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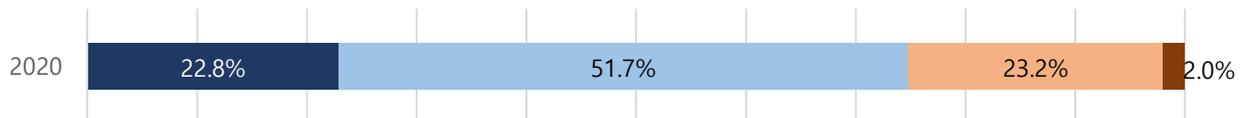
조사에서의 63.8%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앞서 보았듯이 국산품과 외국상품 차별을 앓겠다는 다수 의견과는 달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대기업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국계 기업의 먹튀 논란, 최근에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GM) 철수설이나 인도 마힌드라그룹(Mahindra Group)의 쌍용차 매각설 등 외국계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다국적기업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림 3> 세계화 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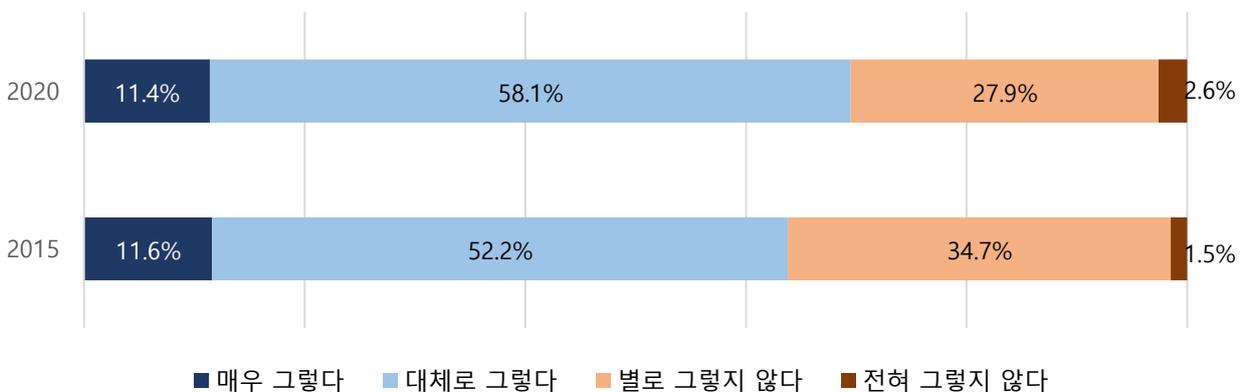
세계화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다



세계화로 우리나라에서도 빈부격차가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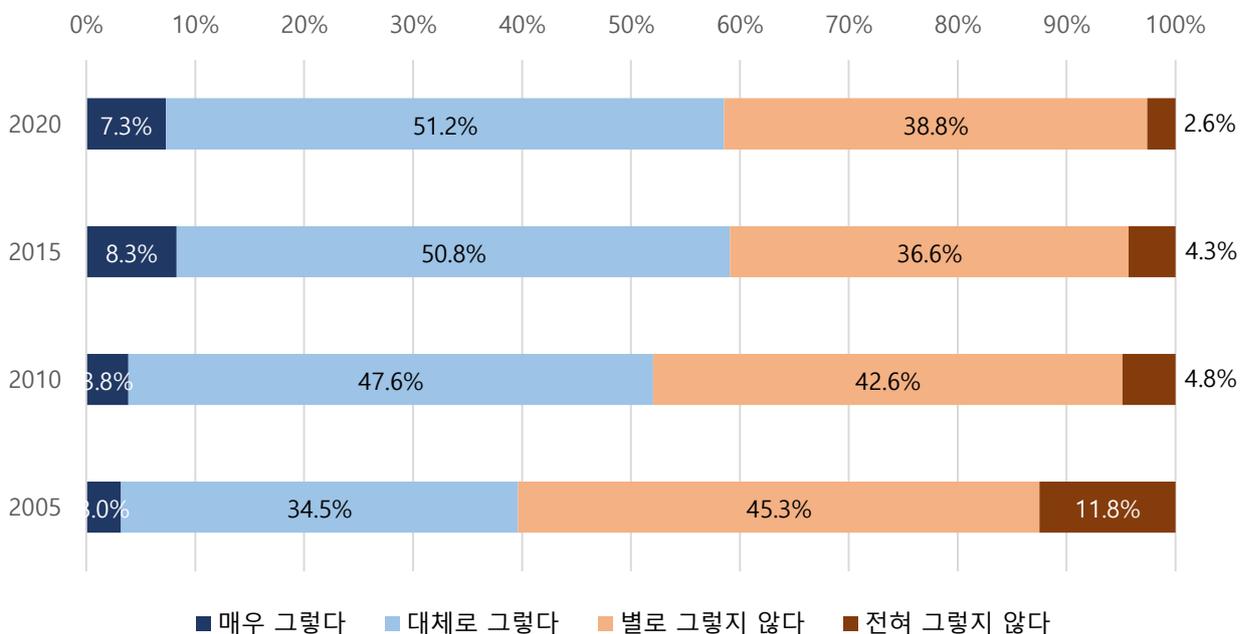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한국의 경제에 점점 더 해를 끼치고 있다



3. 국제기구의 신뢰성과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

한국은 국제법 체결 숫자나 국제기구 가입의 측면에서 세계화된 국가이다.³ 국제질서가 유지되려면 이러한 다자기구의 결정이나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각국 정부가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태도도 중요하다. “한국의 입장과 국제기구들의 결정이 다르더라도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점차 지지를 받고 있다. 2005년 조사에서 이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37.5%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 51.4%, 2015년 조사에서 59.1%로 늘어났고, 2020년 조사에서는 58.5%로 5년 전과 거의 비슷했다. 압도적 다수가 수용적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점차 개선되어 6할 정도의 한국인이 한국 입장과 배치되더라도 국제기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다.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의 경우, 2005년에 67%로 높다가 2010년 50.5%로 떨어져 피해 의식이 완화된 듯했다. 이 수치는 2015년 65.1%로 다시 늘어났다가 2020년 조사에서는 57.9% 다시 줄어들었는데 아직 4할가량의 한국인은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필요로 한다. 제대로 된 대접이라는 말이 국제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국의 국력에 비교하여 국제적 영향력이 아직 미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는 다자무대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리더십을 확보해 갈 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그림 4> 한국의 입장과 국제기구 결정이 다르더라도 한국정부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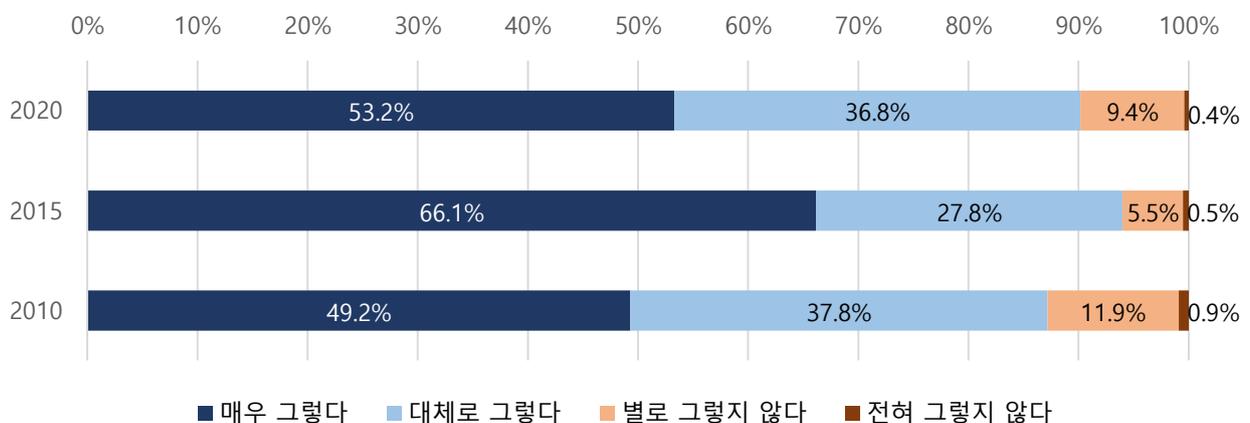
³ Gygli, Savina, Florian Haelg, Niklas Potrafke and Jan-Egbert Sturm. 2019. “The KOF Globalisation Index – Revisited.”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4, 3: 543-574.

2020년 조사에서는 8개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를 0(매우 불신)—5(무어라 말할 수 없다)—10(매우 신뢰) 10개 척도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모든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가 불신보다 4배에서 16배가 많았다. 가장 신뢰를 받은 유네스코(UNESCO)의 경우, 6-10구간 점수를 준 응답자가 66%로 0-4구간 불신 점수를 준 4.1%보다 16배가 많았다. 반면에 코로나19 사태 늦장 대응과 중국 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킨 세계보건기구(WHO)는 불신 구간에 13.6%, ‘무어라 말할 수 없다’에 30.5%, 신뢰 구간에 55.9%가 답해 신뢰를 표한 사람이 불신을 표한 사람의 4배에 불과했다. 대표적 정부 간 국제기구인 유엔(UN)의 경우, 유네스코 다음으로 높은 65.0%의 신뢰를 받았으며 불신을 표한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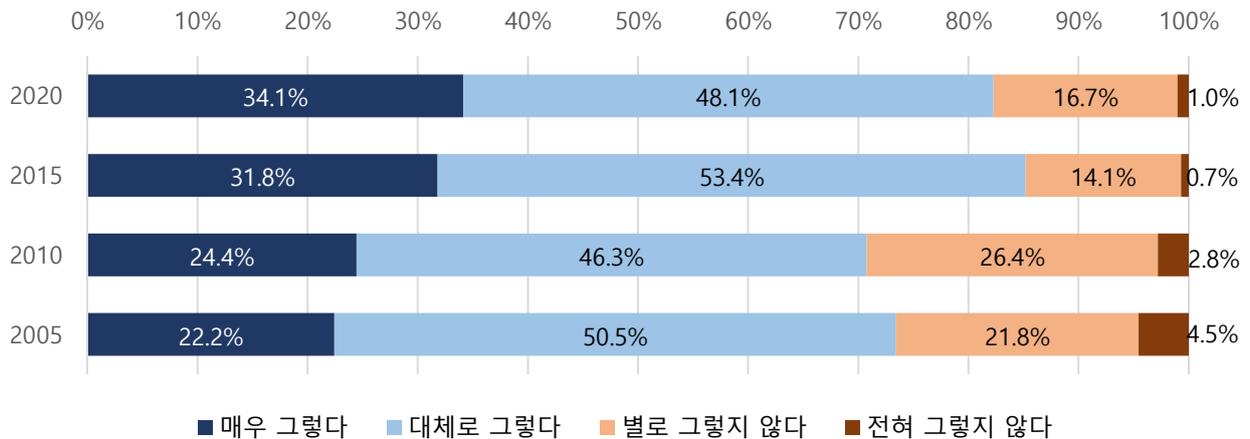
4. 독도, 강력한 군사력, 핵무장 내셔널리즘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다수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나 군사력, 핵무장 등의 쟁점에서는 강한 내셔널리즘을 보인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견해는 2010년 87%, 2015년 93.9%, 2020년 90%로 압도적이다.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5년 72.7%, 2010년 70.7%, 2015년 85.2%, 2020년 82.2%로 압도적으로 높다.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2005년 66.5%, 2010년 68%, 2015년 71%, 2020년 61.8%가 동의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5년과 2020년 사이 약 9% 핵무장 개발 지지 여론이 줄어든 것은 2017년 한반도 긴장 고조 이후 2018년 남북미 정상 간 일련의 회담 및 현 정부의 남북한 관계 개선 노력에 의한 긴장 완화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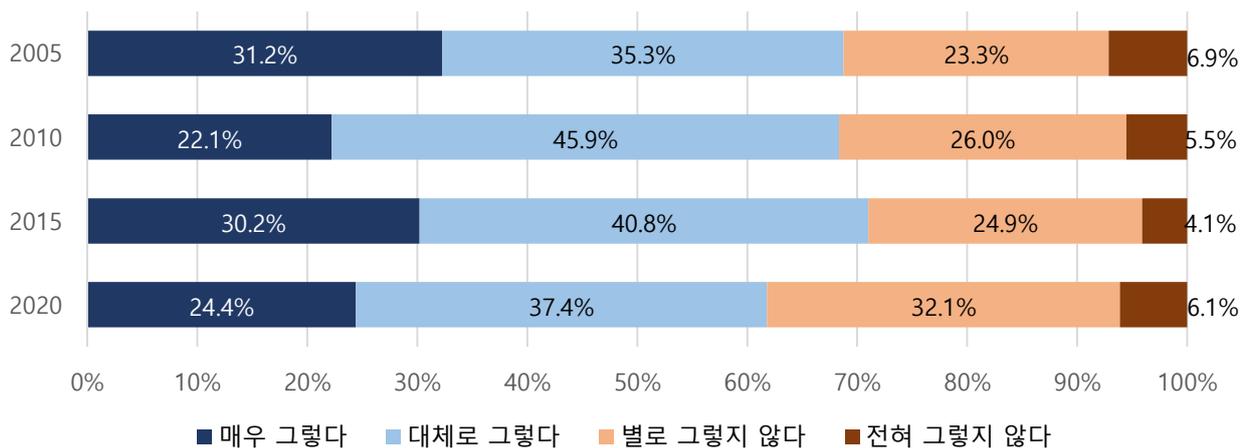
<그림 5>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지켜야 한다



<그림 6>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



<그림 7>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II. 국익 위협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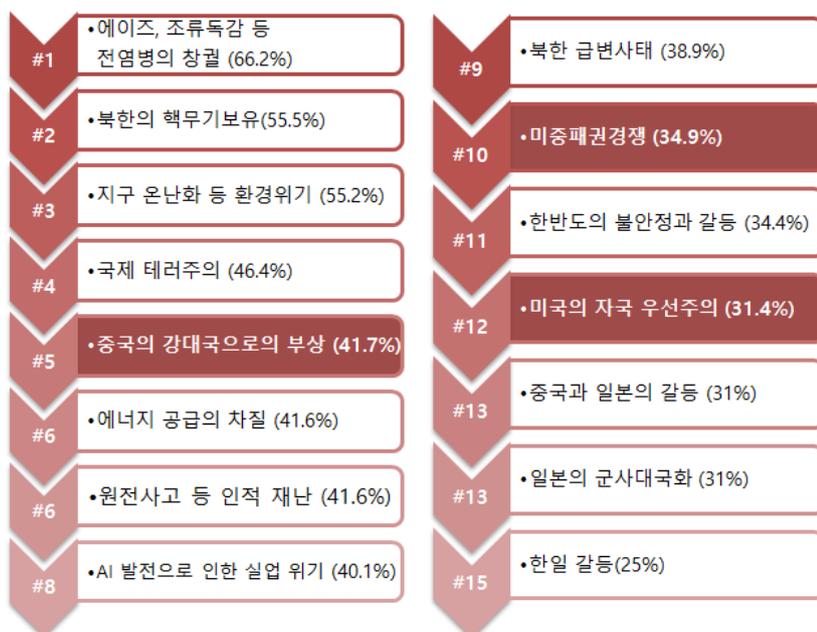
1. 향후 10년간 국익에 대한 위협 요인

동아시아연구원의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2010년부터 “향후 10년 안에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 요인들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이후 새로운 문항들이 몇 개씩 추가되면서 2020년 조사에서는 15개의 위협요인에 관해 묻고 있다. ‘매우 위협,’ ‘다소 위협,’ ‘전혀 위협이 아님’의 3개 선택지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매우 위협’이나 ‘다소 위협’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어, 아래 그림은 2020년 조사에서 드러난 ‘매우 위협’이라고 답한 비중만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에이즈,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창궐’이 매우 위협적이라는 답은 2010년 32%, 2015년 44.4%에 그쳤지만 코로나 19 사태를 반영한 듯 2020년 조사에서는 66.2%로 높아져 한국인이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지구온난화 등 환경위기, 국제테러주의가 상위권에 들었다. 지난 세 차례 조사에서 북한의 핵무기보유가 매우 위협적이라는 답은 46.3%, 60.6%로 늘어났다가 올해 조사에서 55.5%로 다소 줄어들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매우 위협이라는 답이 2010년 16.9%에서 2015년 50.3%로 증가했다가 2020년 조사에서는 38.9%로 줄어들었다. 대신 지구온난화는 41.4%, 48.6%, 55.2%로, 국제테러주의는 27.2%, 46.7%, 46.4%로 지속해서 늘어나 국제사회가 위협으로 간주하는 환경과 테러 문제에 한국인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공급의 차질’ 역시 지난 세 차례 조사에서 31.9%, 37.1%, 41.6% 늘어나고 있으며, ‘원전 사고 등 인적 재난’도 2015년 44.4%, 2020년 45.6%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처음 들어간 ‘AI 발전으로 인한 실업 위기’에 대해서도 41.6%가 매우 위협이라고 답해 에너지 문제와 함께 여섯 번째로 향후 10년간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위협인식의 확산이다.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39%에 그쳤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41.7%가 ‘매우 위협’이라고 답해 다섯 번째로 한국인이 위협적으로 보는 요인이 되었다. ‘미중패권 경쟁’에 대해서도 매우 위협이라고 보는 견해가 2015년 24.4%에서 2020년 34.9%로 늘어났다. 트럼프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대두와 난항 중인 미국과 방위비분담 협상을 고려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2020년 조사에서 처음 물었는데 31.4%가 ‘매우 위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본 관련 요인들은 하위권에 있어 한국인들이 일본 관련 이슈에 반일감정이 크지만 이를 국익을 해치는 큰 위협으로는 간주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8> 향후 10년 안에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 요인 (2020)



III.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1. 주요국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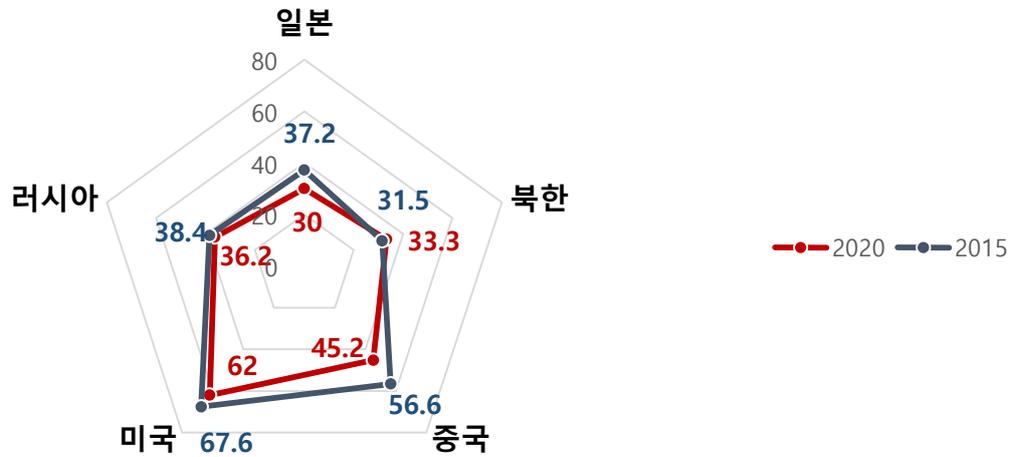
동아시아연구원의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5개국에 대해 0(매우 적대적)-50(그저 그렇다)-100(매우 우호적) 사이 점수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호감도를 묻고 있다. 이들 국가가 받은 평균점은 아래 그림과 같다. 미국은 2015년과 2020년에 각 67.6점과 62점을 받아 5개국 가운데 가장 호감도가 높은 나라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 5년 사이 56.6점에서 45.2점으로 11.4점이 줄어들어 비호감 구간으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에 따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중국이 2016년 2월 한국 정부의 도입 결정 이후 중국 단체 관광의 실질적 금지 및 롯데를 비롯한 진출기업에 대한 경제보복을 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2020년 한국에도 대유행을 불러일으켰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였고, 미중 간에 전염병 확산에 대한 비방전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19가 대중여론을 악화시킨 사례는 한국만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 퓨리서치(Pew Research) 4월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무역갈등으로 나빠진 미국 내 대중 감정이 전염병 확산 이후 6% 늘어난 66%로 발표된 바 있다.⁴

러시아의 경우는 별 변화 없이 38.4점과 36.2점을 기록하면서 적대적 구간에 속한다. 북한은 2015년 31.5점을 기록해 가장 적대적으로 느끼는 나라였는데 2020년 33.3점을 받아 미미한 호전세를 보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5년 사이 37.2점에서 30점으로 낮아져 북한보다도 적대적으로 느끼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식민지시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개인 배상권이 있다는 판결이 있고 난 이후 일본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희소 물질 한국 수출 규제와 8월 한국 수입 품목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등 일련의 통상보복이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규제들은 완화되거나 실질적 의미가 쇠퇴하였지만 2019년 여름 당시 일었던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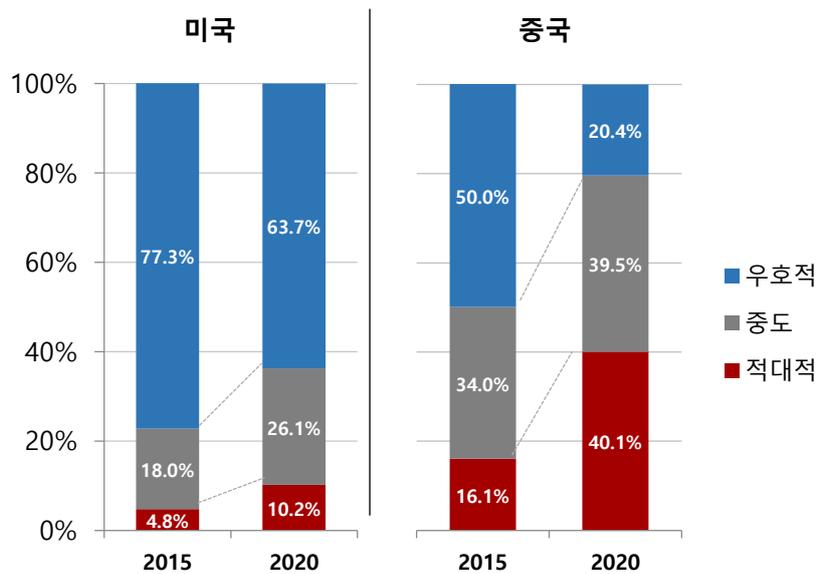
미국과 중국에 대한 단순 평균점 호감도 비교를 넘어 중립적인 50점을 사이에 두고 어떤 쪽으로 점수를 줄지는 상당한 심리적 판단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적대적 구간(0-40점)으로 점수를 준 응답자 비율과 우호적 구간(51-100점)으로 점수를 준 응답자 비율을 비교해 미중에 대한 호감도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난 5년 사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 구간으로의 이동이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5년 사이 0-49점 적대적 감정을 가진 구간에 점수를 준 사람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4.8%에서 10.2%로 늘어난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16.1%에서 40.1%로 많이 늘어났다. 반면에 51-100점 우호적 구간에 점수를 준 사람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77.3%에서 63.7%로 감소한 것에 비하여, 중국의 경우는 50.0%에서 20.4%로 감소 폭이 훨씬 크다.

⁴ Devlin, Kat, Laura Silver and Christine Huang. 2020. "U.S. Views of China Increasingly Negative Amid Coronavirus Outbreak."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4/21/u-s-views-of-china-increasingly-negative-amid-coronavirus-outbreak/>

<그림 9> 주요 5 개국에 대한 호감도 평균 점수
(0점(매우 적대적)-50점(그저 그렇다)-100점(매우 우호적) 사이에서 매긴 점수의 평균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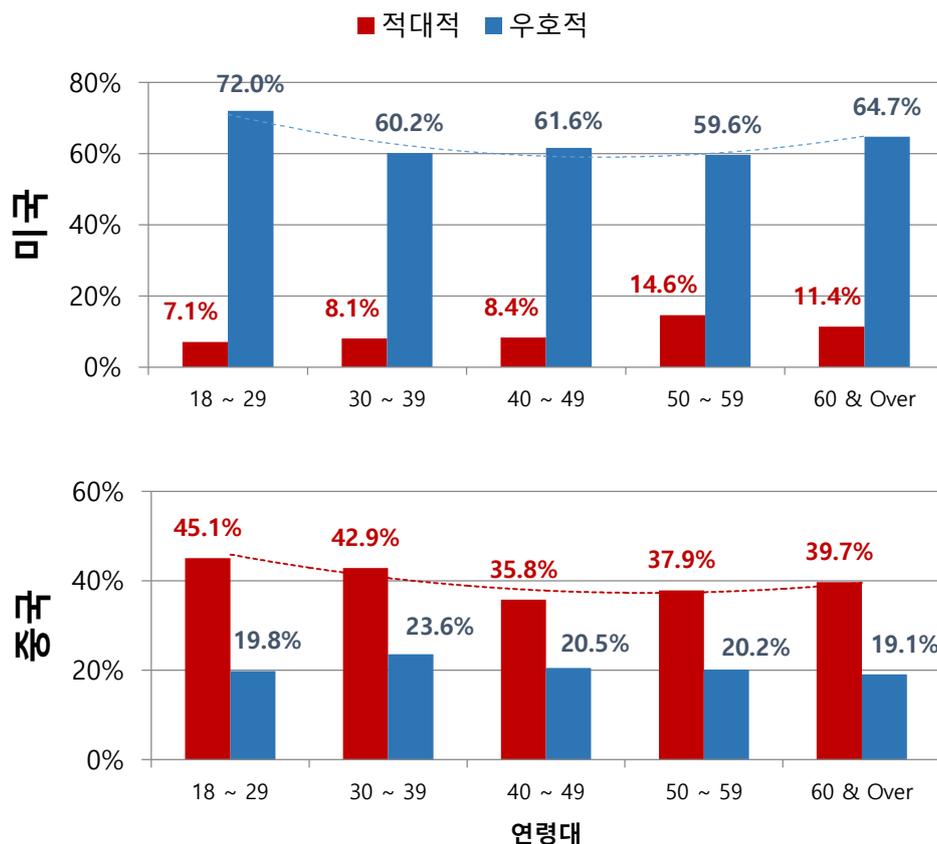
<그림 10>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 (2015-2020)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세대별로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조사에서 0-49점 적대적 구간의 점수를 준 사람과 51-100점 우호적 구간의 점수를 준 사람의 비율을 5개의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 18-29세의 젊은 층은 가장 우호적이지만 50대에서 가장 호감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이른바 '386세대'(30대, 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으로 민주화 경험 세대)가 이제 50대가 되어 '586세대'로 되면서 민주화 세대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해 우호적 점수를 준 사람의 비율은 중장년에서 낮아지다가 60세 이상에서 다시 높아진다. 거꾸로 적대적 구간에 점수를 준 사람의 비율은 18-29세에서 가장 작다가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높아지다 60세 이상에서 다시 낮아진다. 한편, 중국에 대한 호감도의 경우, 18-29세에서 적대적 구간에 점수를 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적대적 구간의 응답 비율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줄어 40대에서 가장 낮다가 다시 상승한다. 반면에 우호적 구간에 답한 비율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미미한 편이다. 흥미로운 점은 2015년 조사에서는 19-29세의 젊은 층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 구간(21.1%)에도 우호적 구간(52.7%)에도 가장 많은 비율로 점수를 주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절반 못 되는 응답자들이 2020년 조사에서 30대로 측정되었을 것이고, 2015년 당시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십 대 후반이 2020년 조사에 젊은 층에 합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5년 사이 대중 호감도 악화는 자긍심이 강한 젊은 층에 상대적으로 더 작용한 것으로 말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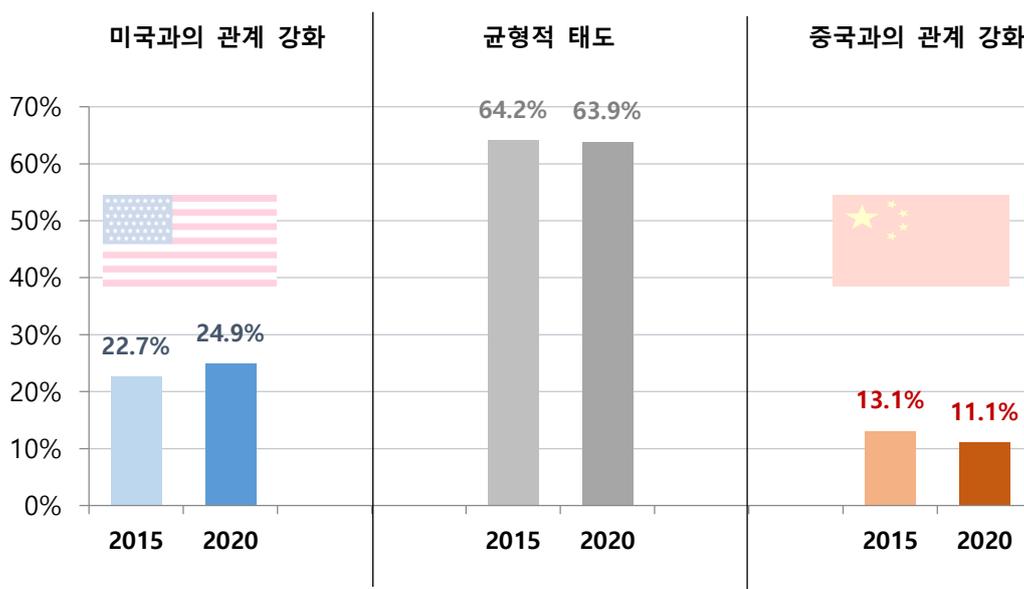
<그림 11>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세대별 호감도 (2020)



2. 미중갈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은 모두 중요한 국가이기에 한국인은 양국 사이 경쟁과 갈등 상황에서 중립을 취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미국이라는 견해가 증가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두 해 조사 모두에서 균형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답이 64.2%와 63.9%로 가장 많았다. 한편, 미국과 관계 강화는 5년 사이에 22.7%에서 24.9%로 늘어난 반면에, 중국과 관계 강화는 13.1%에서 11.1%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지난 5년 사이 한쪽을 택해야만 할 경우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이 중국 편이라는 의견보다 9.6%에서 13.8%로 많아지게 되었다.

<그림 12> 미중 경쟁에 한국이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 (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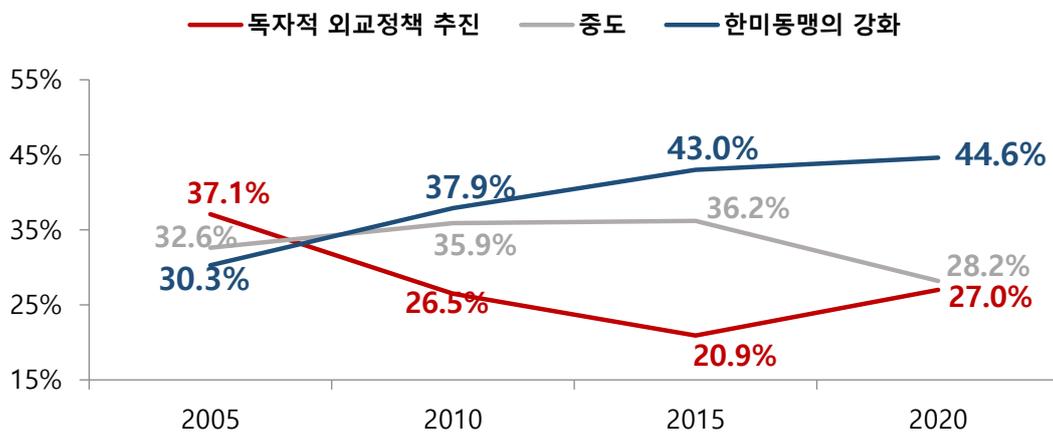


3. 한미동맹 지지도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주요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한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도와 왔다는 긍정적 시각과 한국 외교의 독자성을 구속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공존해 왔다. 특히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과 공조할 수밖에 없는 동맹관계는 대북정책의 독자성을 해친다는 불만이 있었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느끼는 한국에게 한미동맹은 증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압

박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여론은 국내 정권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 15년간 동아시아연구원 정채성 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지속해서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을 지지하면 0, 한미동맹의 강화를 지지하면 10으로, 중도의 입장은 5를 기준으로 0-1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6-10점 사이 동맹 강화 편으로 답한 응답은 2005년 30.5%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조사에서는 44.6%에 달했다. 한편, 0-5점 사이 독자외교 추진을 지지하는 답은 37.1%에서 2015년 20.9%까지 감소했다가 2020년 조사에서 27.0%로 약 6% 증가했다. 중도적인 입장은 30% 초중반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조사에서 28.2%로 떨어졌다. 2005년 동맹강화보다 우세했던 독자외교가 역전되어 2020년에 17.6%의 격차로 동맹강화가 우세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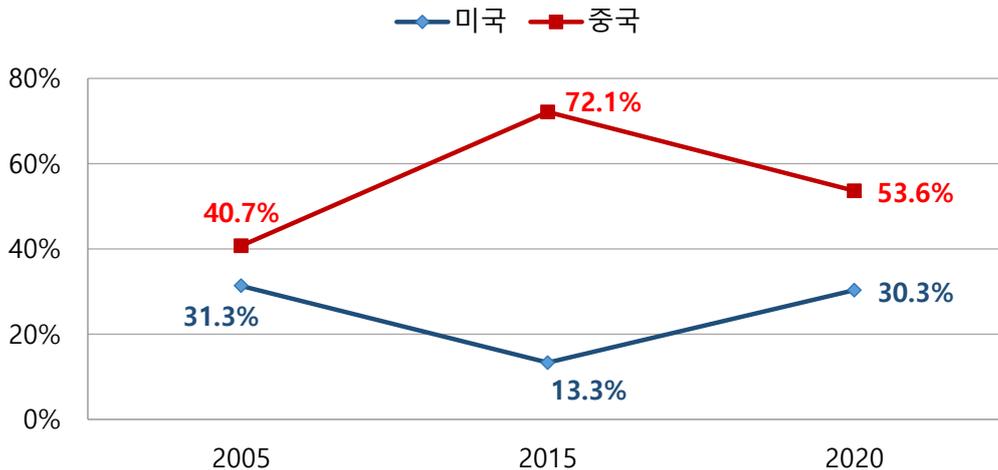
<그림 13> 한미동맹 강화 대 독자외교 추진



이러한 한미동맹 지지 강화 여론은 미국의 세계적 또는 지역적 영향력이 크다고 의식해서이기 보다는 증대하는 중국 영향력에 대한 균형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얻으려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나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중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미국보다 계속 많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5개국 선택지에서 미국과 중국 2개국으로 답이 쏠렸는데 두 나라를 선택한 비율을 지난 세 차례 조사 수치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0년 이후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나라가 중국이라는 답은 2005년 40.7%에서 2015년 72.1%로 급증했다가 2020년 53.6%로 감소했다. 한편, 미국이 그렇다는 답은 31.3%에서 13.3%로 줄어들었다가 2020년 30.3%로 늘어났다. 한중 교역량은 2018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1,620억 달러이고, 한미 교역량은 730억 달러이며, 중국으로 수출은 총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2019년 다른 조사에서도 83.9%의 응답자들은 중국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답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72.6%가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앞서 위협 인식 파트에서 보았듯이 한국인들이 위협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 억지만이 아니라 중국 영향력에 대해 완충재 역할을 해준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아시

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해 미국과의 동맹이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한국만이 아니라 역내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는 물론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전략가들 사이에서 종종 드러나는 생각이다.⁵

<그림 14>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칠 나라 (2005-2020)⁶



4. 미국을 매개로 한 일본과의 안보협력

한국에게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을 매개로 하여 협력하는 주요 국가이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했던 나쁜 국가라는 반일감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개의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했지만,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전시 종군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관계가 급랭하기 일쑤였다.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는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양국 모두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북한문제에 협력 등 한일간에 안보협력은 과거사 갈등에도 지속하여야 한다는 현실론자들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정체성 조사에 나타난 여론은 연계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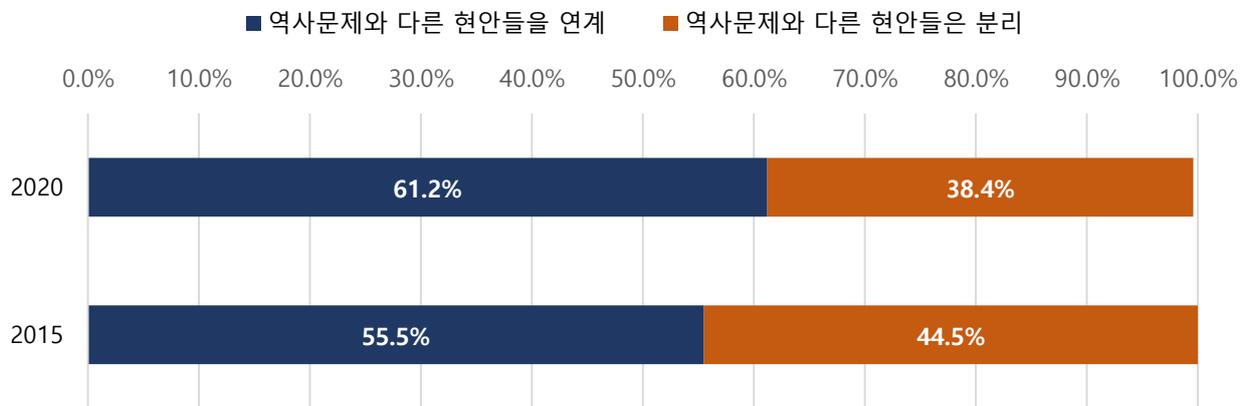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에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사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 년 조사에서는 “한일 양국은 역사문제와 다른 현안들을 연계하여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답이 55.5%로 “역사문제와

⁵ 유사한 논의로는 Lee, Sook Jong. 2019. “ROK-US Cooperation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AI Issue Briefing*을 참조.

⁶ 본 질문은 2010년 조사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일 간의 다른 현안들은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선택지 44.5%보다 10% 많았다. 2020년에는 해당 답변의 각 비율이 61.2%와 38.4%로 격차가 22.8%로 더 벌어지게 되었다. 2015년 정체성 조사 이후 벌어진 위안부 합의 갈등과 2018년과 2019년 사이 벌어진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과거사 갈등을 연계하고 한국은 이를 안보문제로 다시 보복에 연계해 대응하면서 여론도 연계한 동시 해결 쪽이 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런 연계 대응을 부정하면서 상대측이 연계해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양측 정부가 과거사문제를 경제나 안보 현안과 연계해 대응함으로써 말미암아 여론도 자국 정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 결국 양국 정부가 현안을 과거사문제로부터 분리해 협력의 출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그림 15> 한일 역사문제 해결 방안 (201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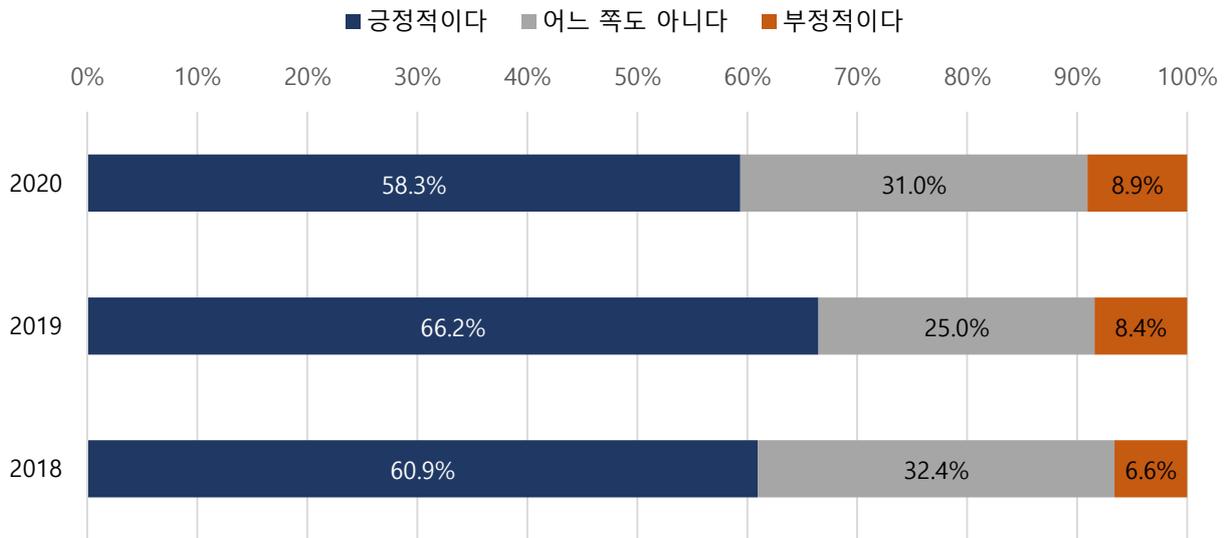


이처럼 과거사와 현안을 연계한 동시 해결 방향에 지지가 늘어났지만,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삼자 군사안보협력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 “한국, 미국, 일본 간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동일한 질문을 했던 한일미래대화 자료와 함께 보면, ‘매우 그렇다’와 ‘일정부분 그렇다’는 답이 지난 3년 사이 60.9%, 66.2%로 늘어났다가 다시 58.3%로 줄어들었다. 2019년 전방위 한일관계 악화는 한미일 삼자 안보협력 지지 여론도 조금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그러나, 중립적 의견을 제외하고 여전히 ‘대체로 부정적이다’와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반대 의견을 보면 6.6%, 8.4%, 6.9%에 불과하다. 2019년 8월 말 한국 정부는 일본의 통상보복에 대해 양자 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11월 조건부 연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당시 국내여론은 동 협정의 폐기가 연장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의견이 갈렸는데,⁷ 미국의 연장 독려가 작용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⁷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전인 2019년 7월 30일 조사에서는 폐지 대 연장 여론이 47% 대 42%로 갈리다가 배제가 결정되자 8월 6일 조사에서는 47.7% 대 39.3%으로 폐기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Realmeter 2019).

⁶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경제보복을 확대한 데 대응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한 결과에서 찬성 47.7% 반대 39.3%로 조사된 바 있다 (Realmeter 2019).

<그림 16>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2018-2020)



IV. 나가는 말

동아시아연구원의 지난 15년간의 정체성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대외 정체성에 있어 몇 가지의 흐름이 발견된다. 첫째는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의 혼재이다. 가장 긍정적인 것은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와 국제법을 지키려는 규범 수용성에 있다. 또한, 개방무역과 외국상품 수용 등 경제인식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외국계 기업, 원조, 외국인 국적 취득 같은 문제에서는 좀 더 비판적이거나 까다로워졌다. 반세계화의 조류를 가져오는 질병 확산이나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공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 강한 군사력, 핵무장 같은 강성의제에 대해서는 내셔널리즘이 강화된 점이 드러난다. 일견 모순적일 수 있는 개방적 아웃바운드 세계화, 선택적 인바운드(inbound) 세계화, 국가 방위 및 수호적 내셔널리즘이 혼재하는 양상이다. 후발 교역 국가인 한국으로서 개방 무역체제 지지와 국제사회에서 국위 선양에 대한 기대를 가지 하면서도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상 영토 및 하드파워에 대한 수호적 내셔널리즘도 동시에 강한 것이다.

국익에 대한 위협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아 전염병 확산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기후변화 같은 환경위기나 국제테러리즘 같은 글로벌 의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크게 반응하게 되었다. 동시에 북핵, 중국 부상, 에너지 안보, 재난과 같은 전통적 안보와 인간안보 모두에 대한 우려도 크게 보인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의심하면서도 일본 관련 이슈들은 향후 10년간 위협요인으로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양자관계에서 중요한 미중일 3국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선 감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높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최근 5년간 급속도로 낮아졌다. 특히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지속해서 공고해졌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상수적인 요인에 더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감을 미국과의 동맹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장래 미국보다 한국에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칠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러한 강대국 부상에 편승하기보다는 역외 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으로 균형을 꾀하려는 것으로 역내 많은 미국 동맹국들이 취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미중 갈등에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한쪽에 선다면 미국과 관계 강화를 우선하겠다는 견해가 지난 5년 사이 늘어났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원래 낮았으나, 특히 2019년에는 국민들이 최악의 한일관계를 반영하듯 일본을 북한보다도 적대적인 나라로 느끼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삼자 군사안보협력에는 찬성이 반대를 압도한다.

한국은 5천만 이상의 인구규모, 경제규모 13위 국가, 군사력 10위권 국가 등 인구 및 하드파워에서만이 아니라 대중가요와 드라마를 세계화한 한류현상과 함께 문화력에서도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20년 한국이 코로나19 초기방역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K-방역의 국제적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의 성공적 거버넌스 모델이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시아의 대표적 중견국인 한국은 G20 참여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다자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⁸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오늘날의 조류 속에 자유주의 다자체제에 많은 혜택을 받아온 한국은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국제질서를 옹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규범을 국내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확산하고 다양한 국제시민사회와 연대에 나서야한다. ■

⁸ Lee, Sook Jong. 2016.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Seoul: East Asia Institute.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 1999-2019. 무역의존도 (수출입의 대 GDP 비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
- 이숙중·장훈. 20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Devlin, Kat, Laura Silver and Christine Huang. 2020. “U.S. Views of China Increasingly Negative Amid Coronavirus Outbreak.”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4/21/u-s-views-of-china-increasingly-negative-amid-coronavirus-outbreak/>
- Gygli, Savina, Florian Haelg, Niklas Potrafke and Jan-Egbert Sturm. 2019. “The KOF Globalisation Index- Revisited.”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4, 3: 543-574.
- Lee, Sook Jong. 2016.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Seoul: East Asia Institute.
http://www.eai.or.kr/new/en/etc/search_view.asp?intSeq=7634&board=eng_book
- , 2019. “ROK-US Cooperation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AI Issue Briefing. East Asia Institute. http://www.eai.or.kr/new/en/etc/search_view.asp?intSeq=17998&board=eng_issuebriefing
- Realmeter. 2019. “‘백색국가 제외時’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 47% vs 연장 42%”
<http://www.realmeter.net/백색국가-제외時-한일-군사정보협정-파기-47-vs-연장-42/>.
- , 2019.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贊 48% vs 反 39%.” <http://www.realmeter.net/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贊-48-vs-反-39/>

■ **저자: 이숙중** EAI 시니어펠로우·이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편저에는,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 **공동 저자: 김세영** EAI 연구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아시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 저서로는 “New North-Southeast Asia Security Links: Defending, Recentring, and Extending Regional Order” (2019,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가 있다.

■ **담당 및 편집:** 김세영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sykim@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9월 28일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편

“한국인의 대외 정체성: 세계화와 주요국 및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

979-11-6617-026-3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